

# 코로나19로 승객감소...버스·택시 내달부터 '차령 1년 연장'

### 초안 보다 대상 확대...내달부터 내년 6월 만료 차량 대상 현행 최대 11년인 버스·택시 차령, 12년까지 사용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택시 업체를 위해 차령(운행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달 시행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이어서 버스와 택시 업계의 차량 교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버스와 택시의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했다.

개정안에는 앞서 지난 4월 말 정부가 발표했던 초안 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버스 차령은 9년, 택시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4~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배기량 2400cc 미만 차량은 7년, 2400cc 이상 차량은 9년이다.

다만 6개월 마다 차량 안전검사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해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버스와 배기량 2400cc 이상 개인택시는

최대 1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초안에서 차령 연장(2년) 전 기간 만료 차량만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최종 안에서는 안전검사를 거쳐 2년이 추가된 차량까지 포함시켰다.

즉 버스와 2400cc 이상 개인택시는 9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뿐 아니라 11년을 12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차령 연장 대상도 초안에서는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로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만료하는 차량으로 대상을 변경·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초안 내용보다 4배 정도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서울역 앞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코스피, 2329.83 장 마감 24일 코스피 지수가 25.24p(1.10%) 오른 2329.83으로, 코스닥은 19.73p(2.48%) 상승한 815.74로 장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8원 오른 1189.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박영선 "2차 재난지원금, 조금 더 지켜봐도 될 상황"

### "8월 초까지 소상공인 매출액 90% 회복...금주까지 모니터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아직은 조금 더 지켜 봐도 되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재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경제상황이) 많이 나빠진다면 정부가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8월 초까지 (소상공인) 매출이 한 90%까지 회복했다"며 당장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소비진작과 관련해 '동행세일'을 7월까지 진행했는데 8월 초 기준으로 해서는 전년대비 90% 수준까지 매출액이 따라왔다가 이번에 다시 2차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서 매출 회복세가 현재 중저도 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관련된 매출은 주기가 굉장히 짧고 코로나19와 굉장히 합수

적인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모니터링을 해보고 더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만약 이번 주 이후 다시 찾아드는 상황이면 그동안 했던 여러 지원 방안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상공인과 관련하여는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 또 각종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9월 말까지 유예조치가 취해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시 연장을 할지 말지에 관해서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기동취재본부

## 광주·전남 백년가게 39개로 늘어...2년 새 7배 증가

### 올해 신규 선정 8곳...홍보·정책자금 등 연계지원

올해 광주·전남지역 백년가게가 최근까지 8곳이 추가 선정돼 총 39개로 늘어났다.

광주·전남지역 백년가게는 2018년 5개 업체로 출발해 2년 새 7배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신규로 백년가게에 선정된 8개 업체를 대표해 최근 '궁전관'에서 현판식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년가게로 거듭난 궁전관은 광주 남구 포충사 인근에 소재한 37년 전통의 닭·오리 요리 전문업체이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올해 1차로 광주의 궁전관과 이은헤어센스, 전남 순천의 화월당 등 3곳을 백년가게로 선정했다.

2차 선정에선 광주의 옥주카센타, 랜드사무기, 이순미용실, 서울계면공업사에 이어 순천의 낙원떡집 등 5곳을 각각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 2018년 첫 걸음을 땀 백년가게 육성 사업은 업력이 30년 이상 된 가게(소기업·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 업체에는 백년가게 확인서와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민간 O2O 플랫폼·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등록, 방송 송출 등 홍보와 컨설팅·교육·정책자금 우대·네트워킹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

백년가게 선정 신청은 온라인(100year@semas.or.kr) 접수 또는 추천(www.mss.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백년가게 육성사업



전남지역 백년가게로 선정된 남도 한정식 전문업소 '강진 해대식당' 전경.

누리집(100year.sbiz.or.kr)에서 자세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기청장은 "우리 지역에 100년 이상 경영할 수 있는 가게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 차량등록대수, 상반기 2400만대 돌파

### 전년 말 대비 1.5% ↑...코로나19에도 내수 증가

우리 국민이 소유한 자동차가 처음으로 2400만대를 돌파했다.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차량 판매가 전년보다 늘어나며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6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3083대(이륜차 제외)로, 지난해 말(2367만7366대) 대비 34만5717대(1.5%) 증가했다.

같은 달 주민등록인구 기준 우리나라 인구 2.16명당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1.2명·2018년 기준), 독일(1.6명), 일본(1.7명) 등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상반기 국내 자동차 내수판매는 99만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 증가했다.

등록대수 기준으로도 지난해 24만 1610대(1.0%) 대비 증가율이 1.43배 커졌다. 특히 올해 1~2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10% 이상 급감했다. 이후 신차 출시 효과와 지난 7월 개별소비세 인하 축소(70→30%)로 인해 판매량이 회복되며 지난 6월에는 전년 대비 4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에 위축됐으나,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 비중은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 판매는 8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했다. 반면 수입차 비중은 올해 6월말 기준 254만1396대

로, 전년말 241만4187대보다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차가 전체 차량등록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에서 10.6%로 0.4%포인트(p) 확대됐다.

노후 경유차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영향으로 경유차가 줄어든 반면 친환경차 판매는 확대됐다.

올해 6월말 기준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록대수는 68만9495대로, 작년 말(60만1048대)보다 14.7%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99%에서 2.87%로 증가했다.

특히 수소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8년 말 893대에서 올해 상반기 782대로 8.6배가 증가해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1530대로 가장 많고, 경기 1103대, 서울 1095대, 경남 768대, 부산 759대 등 순이다.

올해 상반기 중고차 거래량은 192만 35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81만3769건) 대비 6.1% 늘었다. 중고차 수출 말소는 12만1000건으로, 전년 상반기 169만9000건에 비해 28.7% 감소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동차 등록, 정비, 검사, 튜닝, 매매, 폐차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자동차 통계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 지속되진 못할 것"

### "주택가격, 수급 요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는 미래통합당 사병수 의원의 질문에 "현재 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앞으로 매매가격 상승세는 지속되진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경우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시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통화완화 정책으로 풀려난 시장 유동성이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주택가격은 유동성 확대 공급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그 외에 수급 요인이라든지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제도라는 게 겹 투자의 하나로 이용된 건 사실"이라며 "금융권 전세대출 규모는 과잉하고 있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데이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눈여겨 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가격이 급등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주택가격이 올라도 그에 따른 부의 효과, 소비 증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를 진작시키면서 자산가격 급등을 막는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